

지구의 숨통을 틔우는 국제환경협약, 왜 중요한가

글로벌에세이

최성주

고려대 특임교수
전 주폴란드 대사



⑩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규범

현재 지구에는 8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인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지구가 건강해야, 인류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설계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혹성(惑星)이다. 우리가 지구의 환경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18세기 중반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인류의 자연 파괴로 생물다양성이 계속 훼손되고 있다. 사막화 및 오존층 파괴 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위협받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법규범 체계가 작동되고 있다.

현재의 환경분야 국제법규범, 즉 환경법 체계는 일곱 개의 주요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3개 협약은 기후변화 기본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UNCBD), 그리고 사막화방지협약(UNCCD)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해수면 상승, 홍수와 폭염, 가뭄 등 지구 도처에서 기후 재앙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 UNFCCC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협약들은 공통적으로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지만, 파리

협약은 UNFCCC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것이다. 파리협약은 UNFCCC의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지구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가급적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UNFCCC와 달리, 파리협약은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5년 주기의 이행 점검을 통해 감축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생물다양성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규정한다. 그런데 기후변화는 육지는 물론, 바다의 생물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사막화방지협약은 사막화 및 건조 지역의 황폐화를 예방하고, 땅의 생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협약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지속은 산림 훼손은 물론, 사막지역의 확대를 초래한다.

이외에도 오존층 파괴 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멸종위기종 보호협약(CITES) 등도 주요 환경협약에 속한다. 오존층이 파괴될 경우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피부암과 백내장 발생, 농산물 수확 감소 및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던 프레온 가스와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다. 한편, 전남의 순천만 및 무안, 증도 등의 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갯벌은 어패류와 갑각류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면서, 해양 환경을 정화하고 홍수와 태풍 피해를 완화하는 등 지구 생태계를 위해 중요 기능을 수행한

다. 또한 CITES는 인간의 탐욕과 환경 파괴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희귀종(種)의 포획과 거래를 금지한다.

예를 들면, 호랑이 가죽이나 뼈 및 코끼리 상아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CITES의 국내 이행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반자에게는 징역형 등 사법조치를 가하고 있다.

기후와 생물종(種), 유해물질 등 인간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분야별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이 바로 환경협약이다. 현존하는 국제환경협약은 250개가 넘는데, 이 중 중요한 다자 환경협약은 위에서 설명한 7대 협약을 포함하여 20개 정도다. 환경협약을 포함하여 국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협약 위반국에 대한 이행강제 내지 제재조치 여하이다. 이는 곧 국제법의 한계이기도 한데, 국제법의 경우 국내법과는 달리, 주권국가에 대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렇지만, 평가 시스템을 통한 동료 압박(peer pressure) 내지 신뢰구축 등의 실용적 조치는 가능하다.

국제환경법규범의 저변을 형성하는 기본원칙은 지속가능성, 즉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미래세대의 행복과 번영을 생각한다면, 현재 세대의 물질적 풍요는 적절한 수준에서 절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지속가능발전'의 근본 개념이기도 하다. 수많은 환경협약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기후변화협약이다.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고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개인들이 함께 나서서 생산 및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社說

의미 큰 시의회 '용적률 상향 조례안' 부결

모두 수긍하는 방안 마련해야

광주광역시의회가 30일 강기정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쟁점 토론을 넘어 집행부와 의회 간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된 광주시의 재의요구가 전문가 토론과 의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부결된 것은 '소통'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총장·금남로와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3곳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위락·속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될 경우 정주 여건 악화와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광주시와 시의회는 수차례 논의에도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 차이만 확인

하는 등 논쟁을 지속해 왔다.

용적률을 높여 취약한 광주의 중심 상업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면 당연히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과잉공급과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용적률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되레 미분양을 심화시켜 건설업계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위락·속박시설과 주거시설이 뒤섞이고 학교와 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이 부족해 시민의 불편도 가져온다. 재표결을 앞둔 지난 29일 25개 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주거용적률만을 높이는 개정안의 불합리함과 특혜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면밀한 검토와 숙의를 통해 모두가 수긍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광주공동체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식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시의회도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 절차인 서로 토의하는 '대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대의기관의 역할이다.

차별 속 이주민의 삶, 광주 더 따뜻해지길

광주 '진짜 고향' 느끼게 해야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다스림 비추고 있다. 미안마에서 귀화해 19년째 광주에 거주 중인 조애정(초초아이젠) 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민 친구들이 사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듣는다"고 토로했다.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친절과 따뜻한 설명에 감사함을 느끼며 "외국인도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케냐 출신 유학생 엘비스 씨는 9년째 광주에 머물고 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그는 "광주는 제2의 고향"이라며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 휴학을 결정했다"며 지역 내 외국인 취업 기회 부족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광주가 이주민들에게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다문화 공존을 표방한 지 오래지만, 일상 속 차별과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폭언·체벌 같은 구조적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행히도 이주민건강센터, 국제교류센터 등 지역 기반의 기관들이 이들에게 통역, 일자리, 상담 등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은행에서 업무 등을 보러 갈 때도 이들의 도움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지속가능성은 행정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로 정착시키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광주는 5·18의 정신을 품은 도시다. 인권과 정의를 외쳤던 그 목소리는 이제 국적과 언어를 넘어야 한다.

광주에 머무는 이주민들, 나아가 이곳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일자리 하나, 권리를 위한 제도 하나가 이들에게는 광주를 '진짜 고향'으로 느끼게 하는 기반이 된다. 더 이상 '좋은 사람도 있지만 차별도 있다'는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상식이 현실이 되는 광주를 기대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서석대



7월 초하루, 세월 참 빠르다. 어느새 올해도 절반이나 지났다. 옛그제 모내기한 것 같은데, 출퇴근길 지나다니는 성산 삼지천 들판 가득한 벼들이 금세 한 뿔은 더 자라 온통 함초롬하다. 금방이라도 달빛아래 하얀 벼꽃을 피어올릴 기세다.

새맑은 하늘아래 파랗게 치솟는 벼들을 보노라니, 황금 물결 일렁이는 가을날의 풍요가 그려지다가도, 쌀을 전시하는 땀 흘린 세상을 살아야 하는 농부들의 그늘진 눈빛들이 떠올라 캔스레 한숨이 새나온다.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를 담은 생명의 줄기이자 문화의 뿌리이다. 하지만 그런 쌀을 지키는 농민들의 현실이 참으로 고단하다.

찬 이슬 맞고 눈을 살펴야 하는 새벽,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논두렁 따라 골백번 허리를 굽혀야 하는 한낮, 돌아서면 우북해지는 두렁길 잡초 베는 해거름...

젊은이들은 죄다 떠나버려 늙날까지 그렇게 피땀으로 지킨 한 톨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창고에 쌓이고 또 쌓여, 수입쌀과 정책 사이에서 이름도 없이 묻혀간다.

논은 물을 품고, 농부는 생명을 품는다. 하지만 쌀값 하락, 과잉 생산, 소비 감소라는 숫자의 함정 속에 농심은 속절없이 타들어만 가고 있다.

누군가는 말한다. "쌀이 남아 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남은 건 쌀이 아니라, 방치된 구조이고, 부족한 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다. "왜 농민을 보호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푹부러지게 답해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이 땅의 시간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라고.

농정은 조정될 수 있어도 농심은 무너지면 되살릴 수 없다. 쌀 한 톨에 담긴 땀방울과 그 곡선 아래 감춰진 주름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 나라의 농정도 확 바뀌길 기대한다. 아니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농정 공약에서 "농업은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산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 "농정 대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등 온갖 활활만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종잇장이나 마이크만으로는 새 정부 농정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다. 농부들의 한숨을 지우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낱 맹변아래 일하다 붙어오는 한줄기 바람같은 속시원한 정책을 기대한다.

농심이 메마른다는 것은 우리 식탁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며,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말과 같다. 농민이 떠난 땅에는 기계는 남을지 몰라도, 온기와 숨결은 사라지고 만다.

쌀값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경제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올해는 여태까지와는 확연히 달라졌으면 좋겠다. 애를 써서 키운 농산물이 제 대접을 받아 이 땅의 농부들이 환하게 웃으며 어깨춤 덩실덩실 추는 '사람사는 세상'이 오길 고대한다.

최도철 미디어국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차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